

‘정보호’ 어선 전복 미스터리...구조당국이 풀어야 할 의혹은?

선체 인양 시도...실종자 수색 직후 육상서 합동 감식
 ‘왜 침수됐나?’...파손 흔적, 선체결함, 과적 여부 확인
 4차례 검사·정비과정 검증, 해수 유입경로 파악 주력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24t급 근해통발어선 ‘정보호’ 인양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사고 원인 규명 수사에도 탄력이 붙는다. 전복 경위를 둘러싸고 외부 충돌 여부, 설계-건조 결함, 과적 등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정보호는 사고 해역에서 18km 떨어진 신안군 임자면 대허사도 남동쪽 해상에서 인양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유속, 파도 높이 등 해상 여건을 두루 고려해 선체 인양에 착수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인양될 선체는 바지선으로 육상까지 옮겨 거치한다. 이후 선내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서해해양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에 나선다.

해경은 앞서 생존 선원 3명을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선주, 선박 건조업체 대표를 수사 선상에 올려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해경 등 수사 당국은 ‘기관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로 미뤄, 전복에 앞서 기관실이 침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침수, 복원력 상실, 전복에 이르는 사고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수사 당국은 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멍(파공), 균열 여부 등 선체 파손 정황부터 들여볼 것으로 전해졌다. 수중 수색-구조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바닷물 유입 경로를 재차 파악하는 절차다. 선체 설계 또는 건조 과정 상 문제는 없었는지도 확인한다. 정보호는 지난해 3월 건조된

최신 어선이다. 가볍고 강성이 좋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이며, ‘이중선체’ 구조를 갖췄다. 유류 유출·침수 속도를 늦추고자 바닥과 측면을 두 층의 강판 구조로 설계, 빈 공간을 남겨둔 것이다. 이 같은 소재·구조가 적법했는지, 안전에는 문제 없었는지 등을 도면과 선체를 대조하며 확인한다. 선내 적재 가능 하중·만재배수량 등을 산출, 사고 당시 어선에 통발 3200여 개(1개당 3~5kg)를 비롯한 어구·어망을 과적했다는 의혹도 규명한다. ‘엔진 등 구동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수사 당국이 살필 대목이다. 정보호의 동력원은 748마력 수랭식 디젤 엔진이다.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냉각용 배관이 엔진 주변의 열을 낮추는 방식이다. 선체 안으로 바닷물이 오가는 통로인 만큼, 배관 파손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중에서 바닷물과 맞닿는 추진부(프로펠러축) 주변 부속 결함 상태 등도 객관적 분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진수 10개월여 사이에 승선원 변동, 통신키 증설 등을 이유로 3차례 검사를 거쳤고, 따개비 제거·선체 하부 도색도 1차례 진행된 배경



6일 오후 신안군 임자도 주변 해상에 전복되었던 정보호 주변에서 해경의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무엇인지, 검사·정비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조사한다. 혹 불법 개조는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이 밖에 ▲구멍뚫목 미작동 의혹 ▲필수 항해통신 장비 적법 설치·작동 여부 등이 수사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 당국은 온전한 선체 인양이 원인 규명의 1차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관실을 비롯한 선체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물을 확보·복원해야 사고 전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에 집중한다. 생존 선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선체를 육상에 거치한 뒤 합동 감식을 통해 차차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체 결함, 과적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고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시내 5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오는 3월 말까지 설치 계획

우회전신호등

광주시내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등장한다. 7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말까지 광주 지역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지역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시야(시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위해 시행 규칙과 상충하는 기존 횡단보도 578곳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된 만큼 이에 따른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우회전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앞으로 총선 1년 ‘여수 갑’ 선거구 인구 미달...합구나 분구 유지나

1월 말 12만 5700여명...하한 인구수에 1만여명 부족해

제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수 갑 선거구가 인구 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에 포함되면서 향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전국 선거구 정수 253곳 중 지난달 31일 인구수 기준 불합법 선거구 30곳을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여수 갑이 유일했다. 인구수 하한에 따른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합구 등 여수 갑 선거구의 변화 방향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갑과 을로 나뉘는 두 개의 선거구가 있는 여수시는 인구수 34만 명을 정점으로 수년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는 선거 때마다 갑을 선거구 합구 등 선거구 재편 논의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긴장시켰다. 여수시 인구는 지난 1월 말 27만4495명으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 범위 (27만142명)를 근소하게 넘어섰다. 하지만 여수 갑 선거구는 12만 5749명으로 하한 인구수(13만5521)에 미달하고 있다. 여수 을은 웅천지역 등 인구 유입으로 14만 8746명을 기록했다. 여수 갑의 하한 미달은 선거구 통합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나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경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인구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선거구 합병을 통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실제 여수 갑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인 13만9000명보다 적은 12만7254명에 불과했으나 인구수 조정을 통해 겨우 선거구를 유지했다. 13만9027명으로 총선 인구 하한선과 맞닿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2대 총선도 예외없이 여수 을 선거구와 인구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가 주는 여수와 인구가 누는 순천을 합쳐 3명을 선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최근 여수 갑, 여수 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등 3개의 선거구를 여수순천 갑, 여수순천 을, 여수순천 병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여수 갑의 인구 하한 미달에 따라 여수 갑과 을을 합치거나, 순천을 포함한 광역선거구로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데 정치권이 나설 리 없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한 정치인은 “섬 지역이 많고 구도심인 여수 갑의 인구수 변화에 따라 선거 때마다 변화를 예측한 다양한 설들이 많았다”면서 “22대 총선도 여수갑이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지 못해 을 선거구와 합구 및 인근 지자체와 묶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제51회 흙·사람 그리고 불

강진청자축제

2023. 2. 23. 목 ~ 3. 1. 수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